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1997~2011)

〈 목 차 〉

I. 수도권정비계획의 배경

1. 계획성격 및 범위
2. 수도권의 현황과 문제점
3. 수도권정비시책의 추진

II. 수도권정비의 기본전략

1. 여건변화 전망
2. 장래전망 지표
3. 기본목표와 전략

III. 수도권 공간구조의 개편

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공간구조 개편방안

IV. 권역별 정비방향

1. 권역구분 및 정비전략
2. 권역별 정비방향

V. 광역시설의 정비

1. 교통시설
2. 물류유통
3. 정보통신
4. 용수공급

VI. 환경보전과 관리

1. 수도권 종합환경보전대책의 수립·추진
2.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 도모

VII.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계획의 집행
2. 계획의 관리
3. 재원조달

I. 수도권정비계획의 배경

1. 계획성격 및 범위

☐ 계획의 성격

- 이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장기종합계획으로서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배치, 권역별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정함
- 이 계획은 수도권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각종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의 기본이 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없음

☐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 계 획 기 간 : 1997~2011년 (15년간)

☐ 계획의 운용

- 이 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등 이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계획이 수정 또는 새로이 수립되는 경우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음
- 이 계획의 내용실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함

2. 수도권의 현황과 문제점

-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45.3%인 2,019만 명이 거주
 - 수도권의 인구증가율은 감소 추세이나 아직도 전국평균 증가율의 3배 수준

〈 수도권 인구 추이 〉

(단위: 천인, %)

구 분	'70	'80	'90	'95	연평균증가율		
					'70-80	'80-90	'90-95
전 국	31,466	37,436	43,411	44,609	1.74	1.48	0.54
수도권	8,791 (27.9)	13,298 (35.5)	18,587 (42.8)	20,189 (45.3)	4.14	3.35	1.65
- 서 울	5,433	8,364	10,613	10,231	4.31	2.38	-0.73
- 인 천	646	1,084	1,818	2,308	5.18	5.17	4.77
- 경 기	2,712	3,850	6,156	7,650	3.50	4.69	4.35

- 수도권 면적은 전국토의 11.8%인 11,726㎢로서, 대부분 농경지와 임야이며 주거·공장 용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8.4%에 불과
 - 임야 54.9%, 농경지 26.8%, 대지·공장·공공용지 8.4%, 기타 9.9%

- 수도권에서 지역총생산액의 46%가 발생하고 전국 제조업체의 56%가 위치하는 등 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
 - 전국 총사업체수의 58%, 전국공장의 56%, 전국대학의 43%, 공공기관의 82%, 연구기관의 69%가 수도권에 집중
- 수도권 내부적으로 서울과 주변지역은 인구와 시설이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도권 외곽지역은 개발이 미흡하여 불균형적인 공간구조를 형성
 - 과밀억제권역(18%)에 수도권 인구의 87%, 공장의 78%가 집중

〈수도권 집중현황 (1995년 현재)〉

구 분		전 국	수도권 (%)
인 구 주 택	면 적 (㎢)	99,394	11,726 (11.8)
	인 구 (천명)	44,609	20,189 (45.3)
	인구밀도(인 / ㎢)	449	1,722
	주택보급율(%)	86.1	76.5
지 역 경 제	지역총생산액(십억원)*	305,974	141,446 (46.2)
	총사업체수(개소)*	167,403	96,964 (57.9)
	제조업체수(개소)*	91,372	50,810(55.6)
	금융 예금(십억원)	154,136	99,804 (64.8)
	금융 대출(십억원)	152,477	90,409 (59.3)
기 능	4년대학수	131	55 (41.9)
	공공기관수(개소)	513	419 (81.7)
	주요기업본사(개소)	100	88(88.0)
	연구기관(개소)	2,248	1,540(68.5)

* 1994년 기준임

3. 수도권정비시책의 추진

- 6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의 인구과밀문제를 인식하고 '64년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을 시작으로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억제와 지방분산시책을 추진
- '82년에 기존의 각종시책을 포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84년에 『제1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1982-1996)』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수도권정비시책을 추진
 -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로 행위제한을 차등관리
 -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규제, 공공기관의 분산, 지방세의 중과 및 국세의 차등 감면 등 다양한 시책을 도입
- '94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을 전면개정하여 수도권정비시책을 현실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선
 - 종전의 5개권역을 3개권역(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조정
 - 개별적 직접규제방식에서 경제적 규제방식(대형건축물에 과밀부담금 부과)과 총량규제방식(공장, 대학)으로 전환

〈 수도권시책의 전개과정 〉

추진단계	연도	시책명	주관
문제 인식기	1964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건설부
	1969	대도시 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	무임소장관
시책 형성기	1970	수도권 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건설부
	1970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건설부
	1972	대도시 인구분산시책	청와대
	1973	대도시 인구분산책	경제기획원
	1975	서울시 인구소산계획	서울시
정비 추진기	1977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	무임소장관
	198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상공부
	1982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	건설부
	1984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건설부
	199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건설부
시책 전환기	1994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	건설교통부
	199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건설교통부

Ⅱ. 수도권정비의 기본전략

1. 여건변화 전망

-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수도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확대
 - WTO체제·OECD가입 등에 따른 세계화·개방화를 주도하고 국가발전의 첨병으로서 역할 증대
 - 국제기능과 수도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수도권 구조로 변화 필요
- 통일관련기능의 확대와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부각
 - 남북교류 및 협력의 확대에 따른 교류협력 기반조성과 광역교통망의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 증대
 -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높아지고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방식으로 전환
-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생활공간의 광역화가 더욱 진전
 -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재래형 산업의 비중은 계속 감소
 - 고속철도의 운행, 도시철도망의 확충, 승용차보급의 확대로 사회·경제활동이 광역화되고 공간거리의 중요성은 감소
 - 교통·통신의 발달과 소득의 증가로 서울과 주변도시에 밀집된 인구 및 산업이 외곽 지역으로 급속한 분산이 예상

지 역	변 화 전 망
서 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상주인구 감소, 도심공동화문제 대두 · 기능의 고도화에 따른 국제·정보의존형 업무 성장
서 울 근 교 (서울반경 20km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안정, 제조업기능 쇠퇴 · 서울의존도 심화에 따른 자족기반구축 요구 증대
서울중근교 (서울반경 40km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의 안정 성장, 도시간 기능의 상호분담 체계구축 · 서울의 업무기능 및 근교부의 제조업기능의 이전 활성화
서울원교 (서울반경 40km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증가율의 급속한 신장 · 특화된 기능의 도시 성장 및 도농 통합형도시 발생

2. 장래전망 지표

○ 인구 지표

- 수도권의 추세인구는 2001년에 전국인구의 50%(2,284만 명), 2011년에 전국인구의 54%(2,558만 명) 예상
- 인구집중억제의 지속 추진으로 2011년에는 1994년 수준인 전국인구의 45%(2,139만 명) 수준으로 억제

〈수도권 인구지표〉

(단위 : 천인)

구 분	1995	2001	2011	연평균 증가율(%)		
				'90-'95	'95-2001	2001-2011
전 국	44,609	45,687	47,365	0.54	0.40	0.36
수 도 권 (%)	20,189 (45.3)	21,498 (47.1)	21,393 (45.2)	1.65	1.05	-0.05

○ 주택공급

- 가구원수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도 증대할 전망
- 수도권 주택보급율이 2011년 이전에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

〈수도권 주택공급 호수〉

기 간	1995	2001	2006	2011
주택보급율 (%)	76.5	84.5	95.4	103.5
주 택 수 (천호)	3,866	5,086	6,025	6,793

○ 공업용지 수급

-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수도권의 공업생산비중이 2001년에는 38%, 2011년에는 37.5%로 전망되어 신규 공업용지 수요는 2011년까지 49㎢로 전망
- 수도권의 공업생산비중을 2001년에 35%, 2011년에 33%로 억제하기 위하여 멸실면적을 포함한 가동면적 기준으로 2001년까지 27㎢, 2011년까지 44㎢의 공업용지를 공급

〈수도권 공장용지 공급〉

구 분	1993	2001	2011	증 가 량		
				'93-'01	'01-'11	'93-'11
전 국 (㎢)	455	640	800	185	160	345
수도권 (㎢)	118	143	159	25	16	41
서 울	11	9	8	-2	-1	-3
인천·경기	107	134	151	27	17	44

3. 기본목표와 전략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

- 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수도권내 외곽으로 분산
- 분산형의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자족적인 중심도시권 육성
- 기능분산 촉진을 위한 지역간 연결 광역교통체제의 확충

세계화에 대비한 수도권 기능제고와 통일대비 기반 구축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산업고도화 관련기능 확충
-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제 및 수도기능이 미약한 시설입지는 억제·이전
-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협력 공간 마련 및 남북교류망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 주택, 상·하수도 교통시설, 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 도심혼잡,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적극 개선
-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자연환경 파괴의 적극 억제

Ⅲ. 수도권 공간구조의 개편

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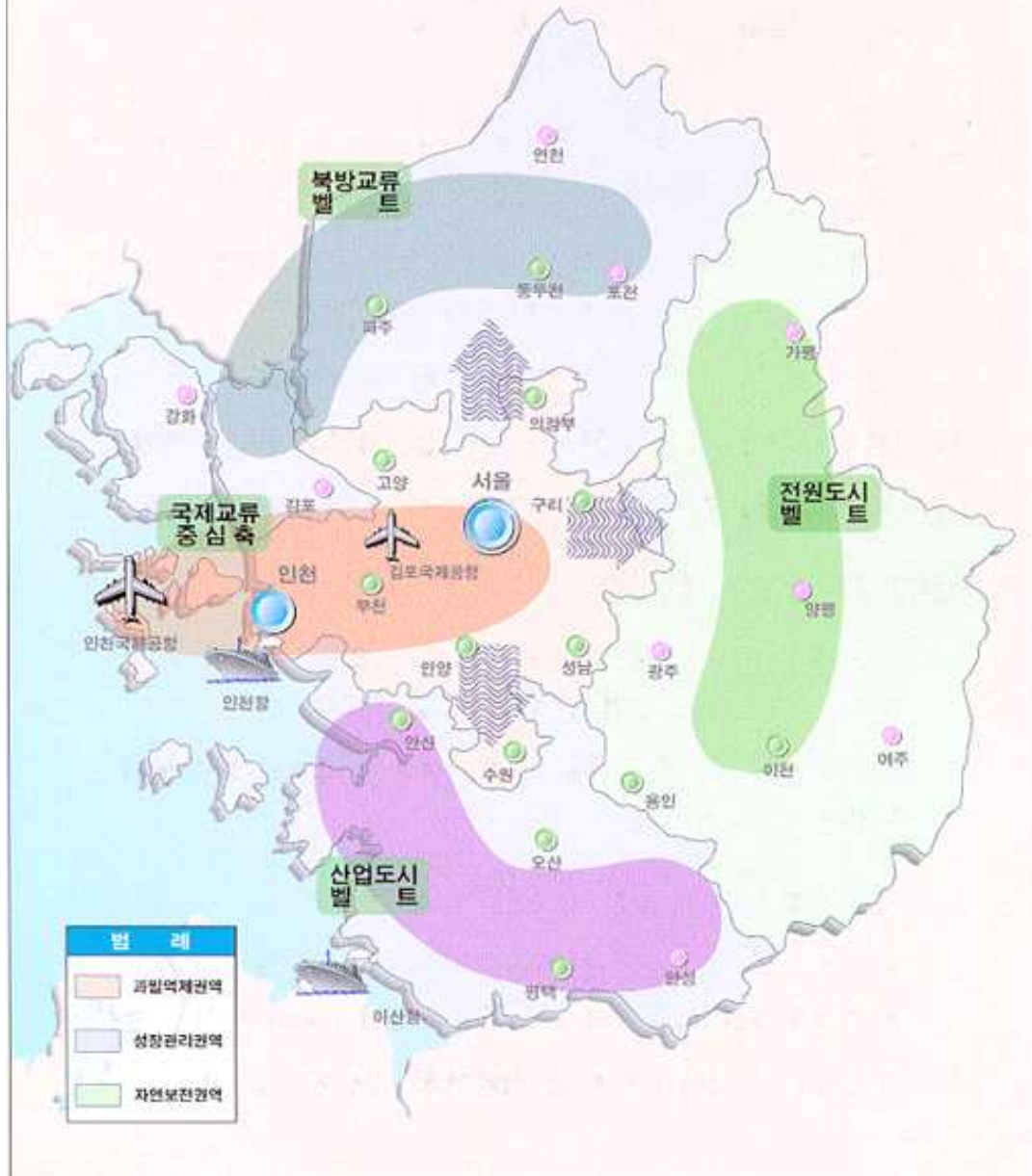
□ 기본방향

- 세계화와 지방화 및 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공간구조의 기틀을 마련
- 수도권 외곽에 지역특성에 맞는 자족적 지역생활권 형성
-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내 지역간 적정수준의 기능분담을 추진

□ 추진전략

- 공간구조 개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
 - 중앙 : 공간구조 개편방향 제시, 광역기반시설 확충
 - 지방 :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 지역생활권내 기반시설 확보
-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의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생활권별 정비계획을 '98년말까지 수립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추진
 - 지역생활권별 정비계획은 지역특성별 자족적인 생활권역으로 육성하는 추진시책을 마련

수도권 공간구조



2. 공간구조 개편방안

가. 서울-인천지역을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정비

- 『서울-인천-영종도』축의 국제업무공간화 추진
 -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국제금융, 첨단정보 및 통신 등의 국제기능을 강화
 - 대형 컨벤션센터, 전시장 등 국제교류 및 업무시설의 확충
 -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을 국제금융·교류·유통·관광 등의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국제업무도시』로 조성
- 국제교역기능 및 물류수송기반의 강화
 - 인천공항·항만의 복합수송기능 강화 및 텔레포트 연결로 교역중계기능 확보
 - 경인운하건설 및 서울외곽순환교통망 구축으로 수송능력 확충
- 경인축의 공간구조 고도화 및 서울 주변도시와의 연계기능 강화
 - 과밀화된 서울기능의 지방 및 수도권 외곽 이전을 적극 유도
 -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첨단기능을 집중적으로 수용
 - 서울주변도시의 서울의존도 완화 및 자족기능 수행능력 강화

나. 안산-아산만 축을 수도권내 산업벨트로 정비

- 서해안에 수도권 필수산업의 입지를 유도
 -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수도권의 개발압력을 분산
 - 안산-아산 공단간 임해산업의 배치 및 내륙공업단지간의 연계
- 수도권과 지방간의 연계물류유통거점지역으로 조성
 - 아산신항과 인천항간의 물류연계망을 구축
 - 고속국도-산업철도 등을 연계하는 광역수송망 건설 및 주요 교통결절지역에 물류유통단지 조성
-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적이고 쾌적한 지역생활권 형성
 - 기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배후 농촌과 조화되는 정주공간을 구축
 - 지역생활권내에 자립적인 교육·문화·여가시설을 보강

다. 파주-포천 축을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거점으로 관리

-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평화의 공간으로 조성
 - 남북간 인적·물적교류에 대비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단지 등의 조성 검토
 - 기존 중심지의 통일지원기능 특성화로 남북교류 전담도시 기능 수행
-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 접경지역의 자연생태계 조사와 자연환경 보전방안 강구
- 자연생태공간과 역사적 유적지 등을 연계하는 광역관광권을 조성
-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자족거점지역 육성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구정착 및 배후 지원기능을 강화
 - 중소공단, 출판문화, 관광 등의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자족기반을 확충
 - 지역간 연결을 위한 광역교통망 및 남북교류교통망 정비

라. 이천-가평 축을 자족적 전원도시 및 관광지대로 관리

- 자연친화적인 자족적 전원생활공간으로 정비
 -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전원주거도시로 개발하고, 새로운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실버촌, 휴양촌, 주말농원 등을 확대
 - 무공해·첨단 소규모 공업단지, 연구단지 등을 조성하여 자족기반을 확충
- 하천과 자연을 활용하는 종합관광지대로 관리
 - 한강수변과 댐을 이용하여 여가공간화 하고 자연관광지와 연계하여 종합 휴양관광지를 조성
 - 농업특화단지, 도예산업 등을 관광자원화하고 다양한 관광루트를 광역적으로 개발
- 지역간 연결교통망의 확충
 - 수도권 동부지역에 남북축 도로망을 건설하고 경춘·중앙선 등의 복선화로 지역간 연계교통망을 확충

IV. 권역별 정비방향

1. 권역구분 및 정비전략

가. 권역구분

- 지역특성에 따라 과밀억제, 성장관리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
 -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중요한 국가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합리적인 방향에서 권역조정을 검토

나. 수도권 권역별 현황

- 수도권 면적의 17.9%인 과밀억제권역에 87.1%의 인구가 집중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면 적 (’94년)	2,100㎢ (17.9%)	5,794㎢ (49.4%)	3,831㎢ (32.7%)
인 구 (’94년)	17,811.3천명 (87.1%)	2,014.7천명 (9.8%)	619천명 (3.0%)
행정구역 (’96년)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남양주시(일부),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16개시	동두천시, 남양주시(일부), 안산시, 평택시, 오산시, 파주시, 용인시, 김포군, 포천군, 연천군, 화성군, 강화군, 옹진군, 양주군, 안성군(일부) 7개시, 8개군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군, 안성군(일부) 3개시 5개군
정비전략	과밀화방지 · 도시문제해소	이전기능수용 ·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보전, 주민생활 불편해소

다. 권역별 정비전략

- 지역특성을 살린 권역별 정비의 추진

과 밀 억 제 권 역	⇒	과밀화 규제 도시문제 해소
성 장 관 리 권 역	⇒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자 연 보 전 권 역	⇒	한강수계 보전 주민생활 불편 해소

수도권 권역구분



2. 권역별 정비방향

가. 과밀억제권역

1) 기본방향

-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규제 및 외곽분산 추진
- 첨단정보, 국제교역 및 고급서비스 위주의 기능 정비

2) 부문별 정비

☐ 도시정비 및 토지이용

- 대도시의 과도하게 집적된 시설은 부도심 및 외곽으로 분산
- 대도시의 주변도시에는 자족적 일반업무·유통 등 대도시 유출기능을 유치하여 자족적 도시기능을 보강
- 복지, 체육·문화, 역사유적 등 여가 및 문화공간을 적극 확충
- 인구집중유발시설 이전토지는 주변여건과 기반시설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 용도로 이용·관리

☐ 공업의 배치

- 대기업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장치형업종의 대규모공장과 재래형업종 등은 지방으로 이전
- 공업지역의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용효율을 높이고 미래첨단·중소기업의 입지공간을 정비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 대 학

- 4년제 대학의 신설은 계속 금지하고 증원도 억제하되, 개방대학·전문대학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
- 지방이전 대학의 대학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 강구

○ 공공청사 입지의 제한

- 국가중추관리기능과 무역, 금융, 언론, 정보·통신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의 제한적 입지 허용
- 업무가 특정분야에 한정되었거나 지방과 관련이 많은 기관 및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과 관련이 있는 공공단체의 지방이전을 유도
- 청단위 기관의 대전둔산지역으로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부속기관도 이전을 검토

○ 대형건축물(업무·판매·복합용 건축물)

- 건축물의 규모는 주변의 환경여건과 교통,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의 처리용량에 따라 결정하고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

- 과밀부담금은 지역균형개발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 연수시설의 증설 억제
 - 연수시설의 신축은 금지하고 지방의 연수시설 입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 이용제도를 개선

나. 성장관리권역

1) 기본방향

- 수도권입지 필수시설의 지역특성별 배치
- 지역중심지의 자족기능 확충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형성

2) 부문별 정비

☐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 기존 중심지의 자족기반을 조성하여 기존주민의 정착과 과밀억제권역 인구의 수용 촉진
- 외곽지역의 고층, 고밀도 개발을 지양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 녹지비율 및 공간 계획에 관한 기준을 강화
- 광역교통망 및 공간구조개편과 연계한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업무·상업·생산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자족적인 생활여건 조성
-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기준을 마련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강화
- 서해안매립사업은 시화 1,2단계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외의 신규사업은 억제

☐ 공업의 배치 및 관리

- 공업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의 이전공장 수용, 낙후지역의 개발, 공장밀집지역의 정비 및 산업정책상 필요한 경우에 지정
 - 경지정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등에서는 억제
- 공업단지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우선 수용하고 업종별로 계열화를 유도
 - 아산만등 임해지역에는 수송용기계, 철강, 목재, 비금속광물등 수도권내 수입원료 의존적인 업종을 주로 유치하고, 내륙지역에는 첨단산업, 부품산업 중심으로 유치
 - 수도권에 산재한 피혁, 염색등 공해공장의 집단화를 추진하고 조건부·무등록공장을 철저히 관리

〈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 공급계획 〉

- 2001년까지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지정계획을 우선 수립·시행하고, 2002년 이후는 지역별 공업화 수준, 제조업의 집중도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공급계획을 수립
 - 2001년까지 성장관리권역내에 총 25.5km²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지정
 - 기존계획 18.7km²는 제1차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정 및 공급을 집행
 - 추가공급 6.8km²는 당해 시장·도지사가 수도권정비계획의 방향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공업지역 지정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공업지역 공급계획 ('97-2001) 〉

(단위 : km²)

시·도	공 급 면 적 (km ²)		
	계 (km ²)	기존계획	추가공급
계 (km ²)	25.5	18.7	6.8
인 천	1.5	-	1.5
경 기	24.0	18.7	5.3

주) 공업지역 : 공장용지에 녹지, 공공시설이 포함된 일단의 지역

- 관련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국가가 시행하는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위의 지정규모와 별도로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 대 학

- 소규모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의 신설은 계속 금지하고 증원도 억제하며,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오는 대학을 수용
- 개방대학과 전문대학의 신·증설은 산학연계 가능지역에 우선 적용

○ 공공청사

- 기존 공공청사의 증축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방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은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
- 신축은 무역·금융·정보통신·첨단과학 등 국가경쟁력 강화기능과 업무가 주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기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연수시설

- 연수수요가 수도권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여가 및 문화공간 확충

○ 다양한 여가공간의 확충

- 도시근교에 산림욕장, 자연학습원, 관광농원, 국민관광지 등 확충
- 서해안에는 해양자원 등을 이용한 종합관광휴양시설을 확충

- 문화·생활체육시설의 지역간 균형있는 배치
 - 생활권 중심지에 문화·생활체육시설을 확충
 - 역사 및 문화유적지를 적극 발굴하여 관광자원 및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
 - 가족단위 및 청소년 위주의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공간을 확충

다. 자연보전권역

1) 기본방향

- 한강수계의 보전에 주력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
- 수도권 주민의 자연환경접촉 및 여가휴식의 공간 제공

2) 부문별 정비

☐ 중소도시의 자족성 확보

- 자연과 어우러지는 자족적 중소도시를 육성하여 인구정착을 유도
 -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형 산업단지, 연구단지를 조성
 - 도시권내 자연취락을 환경친화적 전원주택지로 정비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의료, 휴양시설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
- 배후 농촌지역은 주변도시와 연계하여 도농복합형으로 개발
 - 중심지의 유통, 업무, 교육·문화 등 도시서비스 시설을 확충
 - 주변배후지 주민의 중심지 시설에 대한 이용체계를 개선

☐ 환경보전과 여가공간 확충

- 대규모 택지·공장용지 등의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공해성공장의 신·증축을 규제
- 환경보전이 가능한 선에서 수도권주민 여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안을 강구

☐ 공업의 배치 및 관리

- 저개발된 시·군을 중심으로 2001년까지 총 1.5㎢(기존 0.5㎢, 추가 1.0㎢)의 공업지역을 지정하고, 2002년 이후의 공업지역 지정계획은 추후에 수립
 - 추가공급 1.0㎢는 당해 시장·도지사가 공업지역의 지정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저공해 첨단산업과 연구·기술·정보처리 등 지식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수질오염 등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
 - 경지정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질보전에 영향이 많은 지역 및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개발 억제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 대 학
 - 소규모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하고 입학정원의 증원도 억제
 - 전문대학 신·증설은 산학연계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추진
- 공공청사 : 신·증축은 수질오염과 농지·산림의 훼손이 적은 지역에 한정
- 연수시설 : 기존 연수시설의 증축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신설은 억제

V. 광역시설의 정비

1. 교통시설

가. 교통시설의 확충

1) 철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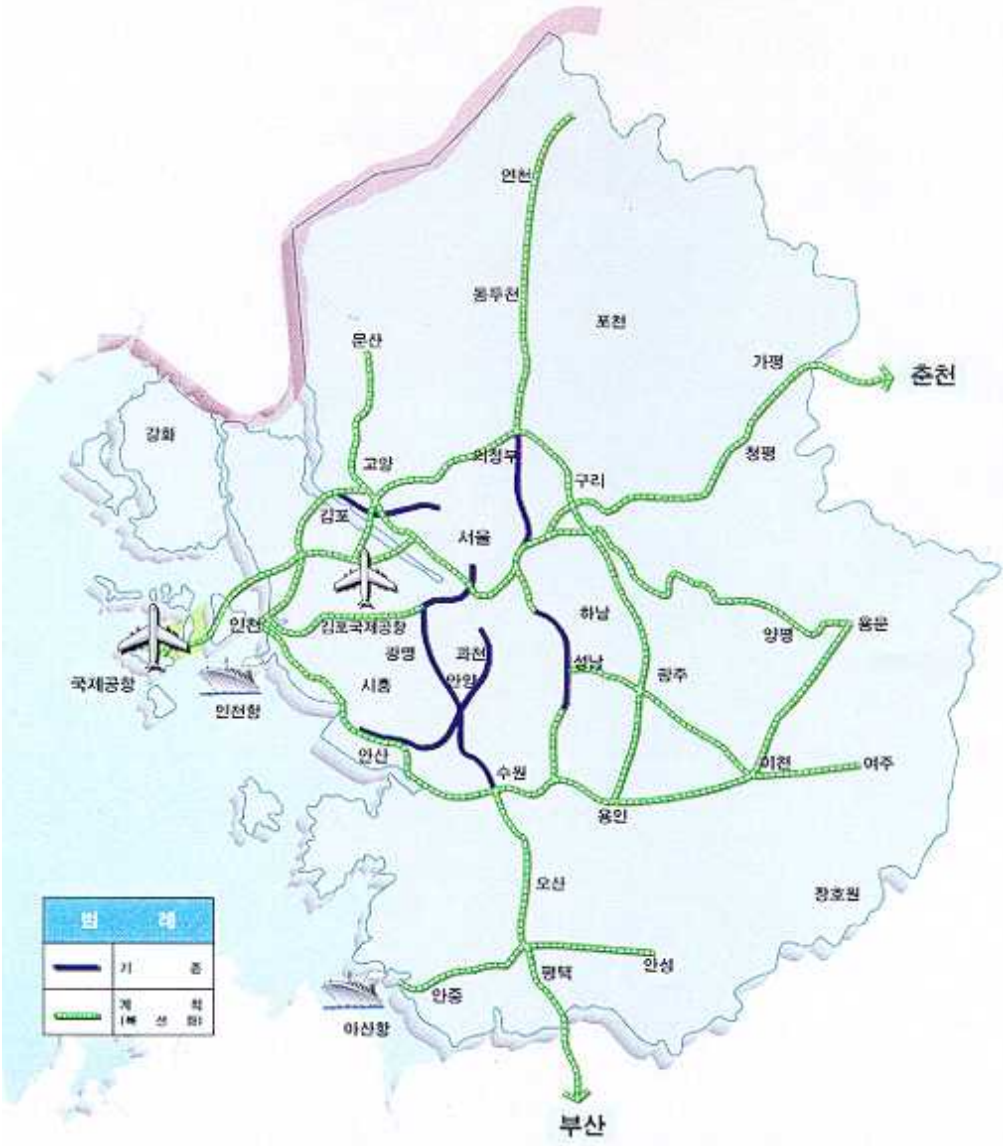
- 단계적으로 철도망을 확충
 - 2001년까지는 기 확정노선 및 서울중심의 방사형 철도망 구축
 - 2001년 이후에는 서울우회노선 위주의 철도망 확충
- 도로의존형 교통체계를 저비용·고효율의 철도수송체계로 개선
 - 도시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철도수송분담율을 28%('94) → 50%(2001)로 제고 (7개 노선 228.8km)

구 분		구 간	연장(km)
신 설	인천국제공항선	서울역- 인천공항	61.5
	분당선연장	수서-선릉-왕십리	12.2
	여주선	성남-광주-이천-여주	57.0
	동남부 외곽순환선	용인-이천-중앙선연결	50.0
복 선 화	경원선(2복선화)	용산-청량리	11.9
	경인선(2복선화)	구로-인천	27.0
	경의선(2복선화)	서울-수색	8.2

- 수도권외곽지점을 연결하는 광역순환선과 지역간 연결 전철망을 확충(13개노선 569km)

구 분		구 간	연장(km)
신 설	수도권순환선	분당-신갈-수원	17.1
		도농-용인-신갈	60.2
		의정부-퇴계원-도농	21.0
		인천-김포-일산	27.0
	남부지역 연결선	평택-안성	23.0
	아산권산업철도	포승-안중-평택	27.0
복 선 화	경춘선	청량리-춘천	87.3
	경의선	용산-문산	46.4
	경원선	의정부-신탄리	55.9
	중앙선	청량리-용문	64.1
	교외선	의정부-능곡	31.8
	수인선	수원-인천	52.8
	경부선(2복선화)	수원-천안	55.6

수도권광역철도망구상



2) 도로망

- 교통밀집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외곽의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촉진할 수 있도록 외곽지역간 연결 고속국도망 건설(8개노선 520.5km)

노선명	구 간	연장(km)
서울외곽순환	안양-서울-일산-퇴계원-하남-성남	126.3
신공항고속도로	서울-영종도	40.2
남북1축	행주대교-강화	32.5
남북3축	퇴계원-연천	49.5
남북4축	양평-가평-연천	93.5
양평-여주	양평-여주	29.8
관교-양평	관교-양평	91.1
동서4축	평택-안성	57.6

- 고속국도의 연계·대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12개노선 478.5km)

노선명	구 간	연장(km)
서울내부순환	성산대교-하월곡동-화양동-강변북로	40.1
제2경인연장구간	안양-봉천동	7.0
안양-하남	안양-과천-양재-하남	28.0
서울-과주	서울 시흥동-과주군	52.4
송산-동탄	화성군 송산-화성군 동탄	34.4
의왕-아산	의왕-수원-화성-평택-아산	49.5
인천-가평	인천 선화동-가평	126.6
서울-춘천	서울 광장동-하남-가평(춘천)	58.0
문산-철원선	문산-연천(철원)	46.2
퇴계원-미금	퇴계원-미금	8.0
하남-진접	하남-진접	15.0
인천-시흥	인천남동-시흥시 도리 I.C	13.3

- 지역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격자형 간선노선망을 구축하고, 장래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교통수요가 집중될 지역은 지방도·군도를 중심으로한 보조노선을 구상
 - 읍면이상의 도시주변구간은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6차선이상의 간선도로 교차지점에는 고가도로 및 지하도등 입체교차시설을 설치
- 국가·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급한 교통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자의 유치를 통한 도로건설사업을 확대
 - 수송애로가 심각한 구간, 기존 도로망의 이용효율 증대가 가능한 노선, 또는 도시내 교통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터널·교량과 그 연계도로 건설사업을 위주로 민자를 유치

수도권광역도로망구상



3)공 항

-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인적·물적교류 및 정보·기술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세계의 중심공항으로 발전 도모
 - 공항과 함께 항만 및 통신기능(Teleport)을 결합하는 첨단 복합기능을 수용
 -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인천국제공항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 1단계(1999년) : 활주로 2본, 여객·화물터미널등
 - 2단계(2011년) : 활주로 1본, 공항 및 접근시설등
 - ※ 완공 후 여객처리 (연간 백만 명) : 13('94년) → 46(2011년)
- 김포공항은 관제시설개량 등으로 항공처리능력을 확충하고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에는 적정하게 역할을 분담

4)항 만

- 아산신항의 개발
 -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아산국가공업단지의 지원과 인천항의 기능을 분담하는 수도권의 거점 항만으로 개발
 - 1997년까지 연간 1,500만 톤, 2011년까지는 연간 6,200만 톤(62선석) 규모의 서해안 국제물류의 중심항만으로 육성
- 인천항의 정비확충
 - 연안화물, 수출입화물 및 컨테이너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복합 항만기능 강화
 - 6,7부두 축조 및 기존시설의 정비로 하역능력을 확충하여 수도권 긴급물동량 처리능력을 제고
 - 인천북항은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하는 방안 검토(5만 톤급 5선석, 처리능력 3백만 톤)

나. 교통 수요관리정책의 확대와 이용체계 개선

- 교통수요관리정책을 확대 추진
 - 도심지역내 주차장건설 규제, 도심과 부도심간 주차요금을 차별화하고 외곽에 저렴한 역세권 주차장 건설 추진
 - 지방자치단체별로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 통근버스운영, 주차유료화, 시차출퇴근제 등의 도입 추진방안을 강구
 - 자전거타기운동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
 - 수도권의 광역교통기구의 설립을 추진
- 대중교통중심으로 교통이용체계 개선
 -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체계를 확립하여 도심진입 시 전철 이용 유도
 - 시내버스 공동배치제 시행을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 가변차선제, 버스전용차선제, 교통체증도로의 일방통행제 확대 추진

-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도입으로 교통체증과 이용불편해소
 - 종합교통안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교통수요 감축
 - 교통량에 따라 교통신호가 자동 조절되는 첨단신호체계를 확대
 - 교통관리를 최적화하고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정보화 사업에 착수
 - 수도권 도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과천지역 시범사업, 핵심기반시설 개발사업을 추진
- 도로, 철도, 항만, 공항시설의 기존 개발계획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광역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2. 물류유통

가. 유통시설 확충

- 교통요충지에 지역간 거점수송체계를 갖춘 대규모 물류·유통단지를 건설
 -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처리능력 1,357천TEU/년), 부곡화물터미널(처리능력 3,170천톤/년) 건설
 -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전국 물류거점간 대량 수송체계로 개편
- 지역단위의 물류체계 구축
 - 서울, 인천은 방향별로 유통단지를 분산배치하여 도시내 교통혼잡 완화
 - 수도권 외곽지역의 교통결절지역에 창고시설, 집배송시설, 도소매시설, 화물터미널등이 집적된 적정 규모의 복합물류단지를 조성
 - 물류단지의 지역정보센터 및 지역단위계획과의 연계개발
- 국제화물의 유통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
 - 공항·항만에 배후연계시설을 확충하고 국제물류센터 기능을 보강
 - 연안화물 처리를 위한 전용시설을 확충

나. 수송구조의 합리적 개편

- 경인지역의 컨테이너 철도수송 분담율 제고 ('93년 28%→2003년 43%)
 - 고속철도에 연계되는 컨테이너 운행열차 증설, 장대열차 운행
 - 의왕ICD와 부산간의 직행열차 운행
- 연안해상수송 활성화와 경인운하건설 추진
 - 컨테이너 화물의 연안해상수송 활성화를 위한 항만 및 전용시설의 건설확대(인천항 '93년 25천TEU→2003년 94천TEU)
 - 경인간 대용량 화물의 경제적 운송을 위하여 인천-한강(행주대교)을 연결하는 경인운하(18km)를 건설하고 화물터미널 및 배후연계 수송시설 설치
- 주요 물류거점의 배후 교통시설계획은 수도권 광역종합교통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다.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종합물류정보망의 실용화 조기실현 추진
 - 화물추적, 재고관리, 선박스케줄, 통계자료 조회서비스 등의 해운물류정보망 체제 확립
 - 열차의 편성·운영, 차량의 이동·배치 등 철도 운영관리업무를 전산화
 - 무선운행허가, 전자운행일지, 적정화물차량배치, 최적경로, 과적여부 등 운행정보의 제공을 위한 화물유통·운송정보망 구축
-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 금융 및 입지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공업단지 내 집배송단지의 설치를 유도
- 인천국제공항과 인근 화물터미널, 항만시설 등의 지역간 물류 초고속정보망을 확충

3. 정보통신

-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 추진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우선적으로 구축(2010년)
 - 지역중심도시, 산업체 밀집지역등 정보화가 용이한 지역에 우선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2015년에는 일반가정까지 연결
- 지역정보센타의 육성으로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
 - 지역중심도시에는 광역정보센타를 설치하고 읍·면·동에는 하위지역정보센타를 설치하여 정보화를 확산
 - 광역정보센타는 지역정보공급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산업·행정 등 공공성이 높은 정보서비스를 공급하며, 하위지역정보센타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공급
-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텔레포트를 개발
 - 지역특성 및 개발방향에 맞는 텔레포트를 개발
 -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외곽에 텔레포트 건설을 유도하여 도심기능의 분산과 부도심기능의 활성화에 기여

4. 용수공급

-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한 신규 수자원 개발 확대
 - 2000년대의 용수수요에 대비하여 건설중인 황성댐을 계획대로 추진
 - 2011년까지 영월댐 등 추가댐을 건설하여 30억 톤의 신규 수자원을 확보
 - 댐공급율 : 42%('94) → 54%(2011) 확보
-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광역용수공급망을 지속적으로 확충
 -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220만 톤/일, 22개시군)을 계획대로 추진
 - 수도권 6단계(140만 톤/일), 7단계(50만 톤/일) 사업을 2011년까지 추진
 - 영종도, 평택, 송탄, 김포, 남양주지역 등의 용수 공급

-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15만 톤/일)를 2001년까지 건설하여 동두천, 포천 등 4개 시군에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

○ 계획적인 용수공급으로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

- 용수공급은 광역상수도에 의한 공급을 우선
 - 기존의 광역상수도는 도시계획, 공공택지개발 등 계획사업에 우선 공급
- 광역상수도 공급이 곤란한 지역은 지방상수도 확충

〈 수도권 광역용수공급계획 〉

(단위 : 천 톤/일)

구 분	1994	2001	2011
계	5,455	9,055	9,555
· 1~4단계	5,455	5,455	5,455
· 5단계(92-98)	-	2,200	2,200
· 6단계(97-01)	-	1,400	1,400
· 7단계(01-11)	-	-	500

○ 수원을 다원화하고 용수수요관리시책을 추진

- 해수의 담수화와 지하수개발로 해안·도서지역의 물부족 해소
- 중수도, 절수형기기 개발, 노후상수도망 교체로 절약적 용수관리의 추진
- 댐원수·광역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절수형 요금체계를 도입

○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을 위한 종합적 수자원 보전대책 추진

- 적정수준의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소규모 축산농가의 하수처리장 확충
- 산림육성과 개발제한으로 수원지역을 보호하고 하천 및 저수지 수질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 강화 등 종합적인 수질보전 대책 추진

Ⅶ. 환경보전과 관리

1. 수도권 종합환경보전대책의 수립·추진

○ 한강수질의 개선 및 생태계 복원

- 팔당호의 수질을 II 등급수→I 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
 - 읍면급 이상 도시하수처리율 : 40%('94) → 100%(2011)
- 하천복개를 억제하고 자연하천 조성을 통해 한강생태계 회복

○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

- 서울, 인천 및 수도권 주요도시에 오존예보체계를 구축하여 차량운행제한 등 신속한 대응방안 수립
- 전철망의 확충 등 저공해 대중교통수단 위주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 경유차량 비율을 연차별로 낮추고 시내버스와 대형트럭 등 경유차량에 매연처리장치 장착을 의무화

-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과 원활한 입지 도모
 - 폐기물의 안전·위생처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위생매립지 및 소각·재활용센터를 대폭 확충
 - 혐오시설의 환경정화능력을 높이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 도모
 -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스포츠·복지·생활환경 교육시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
- 매립지의 토지이용방안 모색
 - 난지도 등 매립완료지역의 환경복원대책 마련
 - 수도권 쓰레기광역매립지에 환경연구 관련시설을 유치
- 수도권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시범도시』를 육성
 - 서해안과 한강, 비무장지대의 생태연결지대, 주요 산악축과 도시 내 공원 등의 녹지대 조성을 통한 대단위 그린네트워크 구축
 - 오염이 적고 쾌적한 환경친화적인 환경시범도시(Ecopolis)를 지정하여 육성
 - 물과 녹지, 생물들을 조화시켜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생태공간(Biotope)을 조성하고 휴식·친수·자연학습 공간을 확충

2.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 도모

-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의 추진
 - 개발계획의 입안 시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의무화, 오염배출량의 저감 등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 서해안의 임해공업지대를 연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는 통합적인 연안역관리계획 수립·추진
- 환경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환경기능제고 사업 실시
 - 그린벨트지역, 상수보호구역 등 환경보전지역의 실태조사 실시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비 및 보호조치 등을 추진
 - 환경보전지역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주민의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
- 주민참여형 환경관리체계 구축
 - 지자체별로 환경정보에 대해 주민이 공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
 - 시·군 등 기초지자체별로 주민이 주축이 되는 환경보전기구를 조직하여 지역환경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Ⅶ.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계획의 집행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소관별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는 관련계획은 수정하여 집행상의 혼선을 제거

2. 계획의 관리

- 계획평가기능의 강화
 -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소관별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연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
 -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주기로 평가 보완하여 계획성을 제고하여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
-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보완조치 강구
 - 본 계획에 추가할 사항이나 보다 발전시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반영
 - 수도권정비계획은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거나 상위국가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신속적으로 운영
- 계획의 조정 및 운영
 - 수도권정비시책과 관련한 중앙정부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상호간의 이견 및 분쟁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조정
 - 수도권정비계획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운영
- 계획집행에 따른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강구
 - 권역조정지역이나 광역기반시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예정지역에서 투기나 땅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기단속반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하여 거래빈번자·외지인 거래자를 파악한 후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3. 재원조달

- 예산의 우선 확보
 -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재원을 확보
 - 그 결과는 매년 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

○ 사업시행 주체

- 대규모 광역사업과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 도시정비, 생활기반시설 확충,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화개발사업 등 국지적 사업은 지방정부 및 민간이 시행
- 택지, 공업단지, 관광지등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라 소요되는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용수공급시설 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

○ 재원투자의 역할 분담

- 민간부문 : 민자유치로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에 참여
- 자치단체 :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공투자 재원을 부담
- 중앙정부 : 자치단체의 투자재원 부족분을 보완하되 가급적 지방발전을 위한 투자에 주력

○ 중앙정부투자가 불가피한 경우 지방도 일부재원을 부담하는 매칭펀드제도 실시